



[경제종합]  
또 오르는 치킨값  
'서민음식' 옛말  
가성비 찾아 마트 간다

04

# metro<sup>®</sup>

Life

[라이프]  
백화점  
봄맞이 할인행사  
혜택 풍성



L1

## “행정-경영 선진인재 배출… 혁신 위한 ‘공공정책’ 펼쳐야”

### 듀얼 인터뷰

유종일 KDI 대학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가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있다. 메트로경제는 언론사 최초로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활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듀얼 인터뷰’를 시도했다.

작년 연말 유 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국가정책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정부와 국회 여러 분들을 만나 ‘국가정책원’ 설립 관련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양한 정책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어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세종시에 발을 두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활용해 ‘국가정책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으로 변모하면 새로운 정책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명실공히 정책 중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하게 된다. 국가정책원은 한국 공공 부문 정책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설립 목표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자체 이사회가 없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지만, 규제는 여타 국책연구기관들과 똑같이 적용된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부속기관이란 한계와 함께 국가 지원이 떠밀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국가정책원은 향후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국가경영대학원, 복수대학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 정책학 석사와 더불어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

KDI, ‘국가정책원’으로 도약 준비  
정책중심 교육기관으로 인재 양성  
정책학 석사·MBA 동시 취득 가능  
AI시대, 역량중심·책임 교육 필요

제경제 등 이론적 정책 분야를 실질적 관리(Management)와 접목해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와 국제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행정-경영 분야 선진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란 평가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챗GPT(ChatGPT)’가 열풍을 넘어 광풍 흐름을 보이면서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3억 명,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억 명을 달성했다. 챗GPT란 미국 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거리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진위 여부,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들이 상충해서다. 챗GPT의 활용과 악용이란 갈림길에서 유 원장은 ‘활용’을 택했다.

유 원장은 “챗GPT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함양을 시사했다. 과거 계산기가 처음 보급됐을 때도 비슷한 사회적 대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는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키워드로 역량중심 교육과 책임 교육을 꼽았다. 그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아닌 문해력, 수리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역량 테스트에 있어서도 학교가 아닌 나라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년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고, 졸업하게 되는 교육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학업적인 부분을 넘어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까지도 살피는 좀 촘촘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책 혁신’, 도대체 무엇인가?

“혁신이라면 보통 신기술, 신상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에 끊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이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야 한다. 국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이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데이터에 입각한 엄밀한 현실분석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이게 ‘증거기반 정책’이고, 선진 혁신경제의 기초다.”

-증거기반 정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은 곧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국민경제와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되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를 거쳐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정책 자문을 했다. 2019년 발표한 ‘전환적 뉴딜’ 보고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거름으로 평가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 등이 있다.

산은 시장 원리와 일관된 금융 규제, 서민주거복지로 풀어나가면 된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게 금방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최근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해법이 간절하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재정 완화보다 긴축이 필요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보니 서민 경제가 어려운 악순환 구조다. 현명한 정책 조합은 무엇인가?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한국 경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 만큼 난제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상은 가능한 자제하고, 재정도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물가 통제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풀어야 한다.”

끝으로 유 원장은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라인홀트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평온을 비는 기도(Serenity prayer)’로 주님을 신으로 번역한 유 원장만의 해석이 돋보였다.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신하은 기자 godh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소속팀 전술 손흥민 ‘족쇄’ 클린스만  
이 풀었다  
▲과제 산적한 한국야구…끊이지 않는  
선수들의 일탈

/사진 뉴시스  
▲모드리치, 사우디 이적설에 “아니라고  
100번 말했다”  
▲유해란 “LPGA 첫 챔피언…신인 된  
심정으로 치겠다”



▲이승엽 감독, 친정 삼성과 첫 만남서  
패배  
▲롯데 자이언츠,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서준원 방출

버스티비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